

私立大 국고지원 확대, 空約아니길

李 圭 正
(釜山女大 國語教育科)

나는 지난 '88년 12월 1일부터 '91년 2월 28일까지 2년 3개월 동안 교무처장직을 맡아 학교의 행정에 깊이 관여한 바 있다. 그동안 교직원의 희망이나 불만 요인, 교직원 상호 간의 갈등이나 알력 등을 체험하면서 고민한 적도 있지만, 가장 큰 고통은 학기마다 있는 登錄金 인상에 따른 학생 대표들과의 협상이었다.

내가 맡은 보직의 성격상 학생들과 대좌하여 해결해야 할 일이 술하게도 많았지만, 등록금 인상에 따른 협상이야말로 생각만 해도 진저리쳐지는 고역이었다. 학생들은 매번 동결을 주장하고, 학교 측은 前期 등록금에 비하여 20~30%의 인상 폭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쪽은 동결을 주장하면서 한 치도 양보를 할 수 없다고 버티는데, 또 한쪽은 수십만 원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니 그 만남이 피차 기분 좋을 수가 없었다. 학생들이 나름대로 내세우는 동결 주장의 이유도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우리의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진 주장이어서 현실을 인정하고 대화를 하자는 것이 고작 학교쪽의 주장이었다. 그러면 학생들은 “현실, 현실하지 말자. 이상없이 현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상을 말하는 우리의 이야기에 틀린 것이 무엇이 있는가? 외국의 대학 등록금 현실은 왜 생각지도 못하는가?” 하고 외국 대학 등록금의 예를 들면서 우기는 데는 어이가 없었을 뿐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大學敎育은 해방 후 양적인 팽창 면에서는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한 지 오래 되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이만저만 낙후된 것이 아니다. 지난 '89년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취학률은 37%로서 미국보다는 낮지만 영국·일본·프랑스 등의 선진국보다 높다고 한다. 대학 진학률도 57%나 되어 단연 선두 그룹을 달리고 있지만, 대학의 질을 결정하는 교수 확보율 곧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30~40명으로서 외국의 1/2~1/3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런 열악한 교육 조건은 많은 財政投資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대체로 학교 운영비의 80% 이상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으니, 이를 잘 알고 있는 눈바로 뚫린 대학생들이 학기마다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대학 당국의 주장에 어떻게 고분고분 따라줄 것인가? 그렇다고 학생들의 요구대로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고 보면, 당장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의 주장대로 재단의 재정 지원을 대폭 인상시키면 되지 않

느냐고 하지만, 알다시피 한국의 사립대학 재단은 거개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부 특수 사립대학을 제외하고는 재단의 학교 지원이 2~3%에 머물고 있으며 그것도 재단에서 마땅히 대야 할 학교 건설비를 대학쪽에 집어넣어 이것을 전입금으로 계산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재단이 학교 살림살이에 지원하는 금액은 그보다 훨씬 낮거나 거의 없는 대학도 허다한 실정이다.

그러면 私立大學이 어떻게 대학을 운영해 가라는 말인가? 말을 바르게 해서,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총·학장이나 보직교수들은 학생들처럼 재단쪽에 대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막말로 대거리하며 마냥 싸울 수만도 없는 입장이다. 이쯤되면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재단 사이에 끼어 오도가도 못하고 공중분해되어야 할 운명에 놓이는 것이 이른바 학교 당국이 되는 것이다. 해마다 인상되는 임금을 만약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키고 연구비나 장학금지급을 동결시켰다고 할 때 막무가내로 학교 당국을 원망하는 데에는 교직원이나 학생이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보직교수들은 보직을 맡은 죄 하나만으로 등록금 협상 문제를 놓고 학생들과 마주 앉아 온갖 곤욕을 치르면서 한 푼이라도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나는 그러한 곤욕을 무려 5번이나 치렀지만 이 기회에 목놓아(?) 정부 당국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이제 한국도 私學에 대하여 國庫補助를 제대로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 당국이 사립대학에 대하여 보조해 주고 있는 금액은 너무나 미미하여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마저 학생 재적 수에 비례하여 지원하게 되므로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국고보조금은 많고, 정작 학생 수가 적은 영세대학은 국고보조금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빈약하기 짝이 없다. 단적인 예로 부산 시내 3개 사립대학의 경우, 학생 수의 과다에 따라 1대학은 4억 1천만 원, 2대학은 2억 8천만 원, 3대학은 1억 2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규모가 큰 1대학의 경우 4억 1천만 원의 보조가 없다 해도 별로 타격을 받지 않을 대학이지만, 규모가 작은 3대학이 받는 보조금 1억 2천만 원은 손에 붙은 밥을 정도도 못되는 액수인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배분 방법이 불합리함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나의 주장은 전반적인 국고보조 액수를 대폭 늘리자는 것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외국의 경우 사립학교에 대한 국고보조는 대단한 액수이다. 미국 사립대학은 대학 운영비의 학생 등록금 의존율이 28%, 영국은 12%, 비교적 높은 편인 일본도 40% 수준이다. 물론 그 나머지를 전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보다는 정부 부담률이 훨씬 높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등록금 의존율이 80%나 되니, 이렇고도 대학이 조용하기를 바란다면 이만저만한 자가당착이 아니다. 생각하면 과거의 문교부는 정말 약삭빠른 것만 골라가면서 했다 하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대학의 자율화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자율을 보장해야 할 것은 아니하고 엉뚱하게 등록금 책정만 대학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등록금 인상에 따른 대학 당국과 학생들과의 거센 마찰의 소용돌이에서 살짝 비껴난 셈이니 이리고서 어느 대학이 과거 문교부의 지시에 입안의 혀처럼 움직여 주었을 것인가?

사학에 대한 국고 지원의 확대 요구는 전혀 억지이고 근거없는 주장이 아니다. 전국의 대학 중에서 사립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문대학이 91.7%, 4년제 대학은 74.4%나 된다. 만약 사립대학이 전무한 상태라면 어쩔 수 없이 사립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이만한 비중의

대학생은 국립대학을 새로이 지어서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설립동기야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사립대학이 이만큼 국가의 교육에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공헌도를 완전히 도외시한 채 국가가 지원을 외면한다면 이는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사실 사학의 역량을 신장시키는 것은 단순히 사학개체의 발전만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이는 국가 발전을 촉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또 할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열악한 사립대학의 제정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學校債의 발행과 기부금 입학제도를 들먹이며 궁색한 변명을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어떠한 방법도 반드시 副作用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선뜻 시행에 옮길 학교가 많지 않을 것이다.

말이 나온 김에 하는 소리지만, 寄附金 입학제도는 처음부터 많은 사립대학에서 반대해 온 것이다. 그런데도 서울의 몇몇 대학 교무처장들이 전국교무처장협의회에서 결의한 양문교부에 그 시행을 건의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지방의 규모 작은 대학은 기부금 입학제도를 시행해 보아야 별 재미를 못본다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작금의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일로 대학교수가 도매금으로 넘어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고, 이에 상응해서 대학의 위상 또한 심히 실추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대학은 양심과 정직, 진리와 성실의 최후의 보루로 남아 있다. 몇몇 교수들의 비리 때문에 전체 대학이 욕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교수 개인의 도덕성 문제요, 따라서 교수 개인이 책임질 문제였다. 그러나 대학이 기부금 입학제도를 허용한다면 이것은 교수 개인의 비리나 도덕성 문제를 초월하여 대학 자체의 道德性 문제로 확대·비약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이 설립 기부금 입학제도가 아니면 문을 닫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그것을 허용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 당시('90년도) 많은 교무처장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때 문교부에서 난색을 표하기도 했지만, 시행 안 되기가 몇 번이고 잦았던 일이다.

요컨대 사립대학 지원금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의 비중을 대폭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GNP의 5%를 점하고 있는 防衛費의 감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세계 정세가 냉전·대결의 구도에서 평화와 화해의 추세로 변화하고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남·북 간의 상황도 UN 동시가입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이미 평화공존의 분위기로 발전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에 이미 확보된 정부예산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와는 다른 재산 관련 세목으로 教育稅 세원을 집중시켜 재원 확보의 공정성을 꾀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이의 전제 조건으로는 금융실명제, 재산과표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튼 사립대학 지원 문제를 더이상 '너희들만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0.16%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 지원을 앞으로 5년 안에 단계적으로 1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한, 지난 '90년 8월 18일 鄭元植 당시 문교부 장관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전국 135개 대학 총·학장 세미나에서 치사를 통해 밝힌 정부의 기본 계획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최악의 경우 이 약속만이라도 부디 어김없이 실천되기를 바란다. ▣